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7.28.(화) 7월 5주차 (제26-43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경제) 중동 전쟁 장기화와 관세 영향 지속…미국 경제 전반 압박 가중 ····· 2
• (산업) 美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첨단 제조 세제지원 확대 논의 ····· 6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기업,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 9
• (관세) 美 와이든 상원의원, 대통령 관세권한 제한 법안 발의 ····· 9
• (환율) 美 재무부, 한국 등 10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 10
• (관세) 美, EU의 빅테크 제재에 301조 조사 착수 및 추가 관세 부과 추진 ····· 11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 핵심광물, 조선업, 인공지능, 관세 관련 입법 7건 ····· 12
• (행사) CSIS, GovConWire 등 행사 2건 ····· 13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4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15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7.29(수)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결정(FOMC interest-rate decision)
7.30(목)	• 7월 넷째 주 주간 실업 수당 청구(Initial jobless claims) • 6월 개인소비지출(PCE) 근원물가지수 발표(PCE Core Price Idx)
7.31(금)	•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발표(U. Michigan Final Consumer Survey)
8.3(월)	• 7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발표(US Manufacturing PMI)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경제) 중동 전쟁 장기화와 관세 영향 지속…미국 경제 전반 압박 가중

- 중동 전쟁 장기화와 관세 정책 확대에 따른 에너지·소비재 물가 상승 압력
- 고용 둔화 속 물가 재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금리 인상 우려 고조, 연방 재정 부담 가중
- 물가 상승·경제 압박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경제 부담으로 부상

1. 배경

□ 중동 전쟁 장기화 및 관세 정책 확대가 미국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

• 중동 전쟁 장기화·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 미·이란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서명(6.17) 직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하락*했으나, 7월 중순 사실상 합의가 무산되며 가격 재상승

* 소비자 휘발유 가격은 5월 중동 전쟁 정점(갤런당 4.56달러) 이후 휴전 합의로 6월 중순 4달러 아래로 하락, 7월 20일 합의 무산 이후 다시 4달러대를 재돌파

- 전쟁 발발 전인 2월 배럴당 67달러 수준이었던 브렌트유 가격은 7월 23일 기준 전일 대비 7% 급등한 배럴당 100.65달러로 마감, 전년 동기 대비 45.49% 급등

* 미·이란이 공격을 자제하며 브렌트유는 6% 급락해 91달러대로 재차 하락(7.27)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까지 병행 확대되며 미국 경제에 부담 가중

- 대법원의 IEEPA 근거 관세 위헌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법적 수단*을 활용하며 고율 관세 기조 지속

* 122조(10%), 232조(철강·알루미늄·구리 50%, 자동차 부품 25%, 반도체 25%, 등), 338조 (캐나다 50%), 301조(강제 노동 10%~12.5%) 등

-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와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동시 작용하며, 기업 비용과 최종 소비자 가격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확대

2. 美 거시경제 파급 효과 및 주요 리스크

□ 에너지·관세發 이중 물가압력, 소비자·기업 비용 전반에 확산

• 소비자물가의 전반적 상승, 에너지·식품 부담은 저소득층에 가중

- 연준의 「통화정책보고서('26.7)」에 따르면 5월까지 12개월간 PCE 물가는 4.1%, 근원 PCE는 3.4% 상승해 1년 전(2.5%, 2.8%) 대비 대폭 상승

- 동 기간 PCE 에너지 가격은 24% 폭등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는 지출에서 식품·에너지 비중이 커 가격 변동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

* 식품 가격은 팬데믹 이전 대비 약 30% 높은 수준으로, 평년 상승률(8%)을 크게 상회

- 유가 상승·관세가 겹치며 농가 디젤 비용 급증, 식료품 가격 전이 우려 제기

* 의회 합동경제위(JEC) 보고서(7.24): 이란發 유가 상승과 관세가 겹치며 美 농가의 올해 파종철 디젤 비용이 전년比 63% 급증한 14억 달러 추가 부담

• 관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복합되며 비용 전가 압력 확대

- 연준의 베이지북(7월)에 따르면 12개 연은 지역에서 관세發 비용 상승이 보고되었으며, 다수 기업이 가격 인상이나 추가 할증료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

*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완제품에 50%, 일부 파생상품에 25% 적용) 발표 직후 미국 내 알루미늄 프리미엄이 45% 급등해 톤당 1,240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 특히 제조업체들의 원자재·부품 비용 상승폭이 최종 소비재 가격으로 전가*

* 애플, 반도체 메모리·저장장치 공급 부족에 따른 투입비용 상승분을 상쇄하기 위해 맥·아이패드·홈기기·비전프로 전 제품 가격 인상 발표(6.25)

□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연방 정부 재정 부담 가중

• 물가 재상승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 6월 FOMC 회의에서 18명 정책위원 중 9명이 연내 최소 1회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지지, 도표상 2026년 말 금리 중간값 전망도 상향 조정(3월 3.4%→6월 3.8%)

-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7.28~29)에서 기준금리 3.50~3.75% 동결이 유력하나, 물가 압력에 따른 25bp 인상 가능성 상존

* 시카고 CME 그룹 페드워치 기준 9월 FOMC 금리 인상 확률: 6.12일 26% → 7.16일 73% → 7.24일 82%로 급등

• 美 **국채금리 상승, 연방 정부 재정 부담 가중으로 직결**

-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7%를 돌파해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의회예산처(CBO)가 '26년 예산 전망 수립 시 가정한 평균치(4.1%)를 이미 상회하는 수준

-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9조 달러(GDP 대비 5.8%)로 사상 세 번째 규모, GDP 대비 연방부채 비율도 현재 100%에서 '36년 120%까지 상승 전망*

* CBO는 금리가 가정치 대비 0.1%p 추가 상승할 때마다 향후 10년간 이자비용이 3,790억 달러씩 늘어난다고 추산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및 여론 악화·중간선거 변수로 작용 가능성**

• **고용 증가세 둔화 속, 물가 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노동시장도 실업률 4.2%로 견조하지만,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5.7만 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11.5만 명)을 크게 하회, 4·5월분 지표도 합계 7.4만 명 하향 조정

- 미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6월 실업률은 참가율 하락(61.5%, '21.3 이후 최저)에 힘입어 4.2%(12개월 내 최저)로 개선됐으나, 취업자 수는 오히려 50.7만 명 감소

- 광범위한 관세 확대 및 이민 단속 강화가 노동 공급 감소 및 기업의 채용·투자 위축을 유발, 노동시장의 구조적 부담 심화(JPMorgan, Conference Board 등 종합)

• 美 **경제 부진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유권자 여론에 반영**

- 고물가 및 경기 둔화로 트럼프 경제 국정운영 지지율 31~38%로 역대 최저권(CNBC 38%(7.8~12 조사), CNN 31%로 최저) 기록

- 하버드 CAPS/해리스 조사(7월) 결과, 유권자 58%가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응답, 77%는 인플레이션이 연 3%를 상회한다고 인식, 체감경기 악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 7월에 시행된 폭스뉴스 조사에서경제 문제 신뢰도에서 민주당(48%)이 공화당(41%)에 앞서, 2006년 이후 최대 격차를 기록

3. 시사점 및 전망

□ 에너지·물가·관세 요인이 맞물리며 행정부의 정치·경제 부담으로 부상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충격 및 공급망 불안 심화

- 전 세계 석유·천연가스 수송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및 홍해·흑해(CPC) 등 여타 수송로까지 동시에 압박받으며 공급망 불안정성 고조

- 중국 등 주요국의 비축유 완충 여력 감소, 재고 확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

  *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5~6월 사이 하루 620만~660만 배럴이었으나, 7월 수입량은 하루 약 780만 배럴 수준으로 대폭 반등

• 미국 경제의 견조한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 경제 이슈가 중간선거 변수로 부상

- 현재 미국 경제는 여전히 2.3%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2%)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착될 가능성 우려 제기

  * IMF의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에 따르면, 미국은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2.3%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행정부는 유가 및 물가가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 주장하나, 시장은 추가 공급 여력, 정부 비축유(SPR), 정유 가동률*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회의적 시각 유지

  * 미국 정유 가동률도 96.2%(7.17 기준, EIA)까지 오르며 국내 정제능력 측면에서도 추가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

- 기업들은 정부의 리쇼어링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빈번한 관세율 변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단기 투자 계획 수립에 부담을 토로

- 유가·물가 상승이 가져온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제 신뢰도 저하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요 변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7.25), 뉴욕타임스(7.24), 블룸버그(7.24) 등 현지 언론 종합

(산업) 美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첨단 제조 세제지원 확대 논의

■ 美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5년 이후 둔화, 세액공제·산업전략 지원 확대 논의 확산

■ ITIF는 생산성 향상 기술 도입에 대한 25% 세액공제 신설을, NASEM은 국가 산업 전략 수립과 제조 공정 R&D 세액공제 신설을 제안

■ 현지에서는 업계 R&D 투자 확대에도 양산역량·인력 부족이 지속된다는 평가와 함께 세제 인센티브 유지 필요성 제기

1. 개 요

□ **美 제조업 생산성 정체 진단 잇따라, 세제·산업전략 지원 확대 논의로 확산**

- **최근 미국 제조업의 고용·투자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생산성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라 제시**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정체가 일시적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현상이며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 생산성 향상 기술 도입에 대한 25% 세액공제 신설을 제안(7.20)

- 미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은 미국이 제조업 국가전략 부재로 연방 제조업 프로그램을 과소 지원해 왔다고 지적, 산업전략 수립과 제조 공정·기술 대상 R&D 세액공제 신설 등을 권고(5.14)

-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매출·R&D 지표가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력·공급망 측면의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7월)

- **제조업 부흥 기조가 강조되는 가운데 관세 이외의 정책수단, 특히 세제·기술도입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흐름**

- 특히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48D)는 2025년 세법(OBBBA)으로 공제율이 25%에서 35%로 인상됐으나 2026년 말 착공 기한이 도래

* 현행 △§48D 반도체·반도체 장비 시설 투자세액공제 35%('26.12.31 착공분까지) △§168(n) 적격생산자산 즉시 비용화('29.1.1 착공분까지) △§168(k)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 적용

2. 상 세

□ 美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둔화, 2005년 이후 첨단산업 중심으로 급락

- **ITIF는 미 노동통계국(BLS) 생산성 통계를 근거로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1987~2005년 연평균 3.8%에서 2005~2023년 연평균 0.4%로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

- 생산성 정체는 단위노동비용(제품 한 단위당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 약화와 증설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하락세는 제조업 전반에 나타나며,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27개 산업 중 2005년 이후 증가율이 개선된 산업은 2개(피혁·담배)에 불과한 반면 첨단 제조업은 전부 하락

* 컴퓨터·전자제품 제조는 1.9%(1987~2005)에서 -1.2%(2005~2023)로 약 3%p 하락, 항공기 제조도 유사한 폭의 하락 기록

- 이에 ITIF는 의회가 산업용 로봇, AI 시스템, 첨단제조 소프트웨어 등 생산성 향상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25% 세액공제를 신설해 기술도입 비용을 인하할 것을 제안

□ NASEM, 국가 제조업 산업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권고

- **대부분의 주요 경쟁국이 국가경제전략과 연계된 상세한 제조업 전략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산업·정부 간 노력을 조율할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다고 지적**

- 이로 인해 Manufacturing USA(국립표준기술연구소 조율, 17개 첨단제조 연구소)를 포함한 연방 제조업 프로그램이 과소 지원됐고, 검증된 분야의 양산 확대 투자도 미흡했다고 평가

* 미국 제조업 생산성은 지난 15년간 현저히 하락, 중국은 2011년 이후 세계 제조업 생산 1위를 유지하며 현재 세계 제조업 총생산의 약 35% 차지(미국 12%)

- 주요 권고사항으로 △NEC·OSTP·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 등의 향후 2년 내 국가안보전략 연계 산업전략 수립, △제조 공정·기술 대상 R&D 세액공제 신설 등 제조업 세제개편 확대, △제조업 특화 국부펀드 등 장기 투자수단 도입 및 △부처 간 협의회 신설 제시

3. 현지 반응 및 전망

□ **현지 업계는 인력·공급망 과제와 함께 세제 인센티브 유지 필요성 제기**

- **SIA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상 최대 실적에도 인력 부족과 공급망 리스크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며, 반도체 연구·설계·제조 투자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 유지를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

  - 2030년까지 관련 산업의 기술인력 6.7만 명 부족이 예상되며, 중국의 갈륨·게르마늄·희토류 수출통제와 범용 반도체 과잉생산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

- **특히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48D)의 2026년 말 착공기한을 앞두고 업계의 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요구가 확산**

  -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7월 하원 세입위·상원 재무위 의원 면담을 통해 다년 연장과 소재·설계 부문으로의 대상 확대를 요구했으며, 관련 법안도 복수 발의된 상태

  - 팹 부지 선정·인허가·자금조달·건설에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2026년 말 착공 기한이 산업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일몰 임박이 투자 계획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

  * 2025년 세법에는 공제율 인상(25%→35%)만 반영되고 기한 연장은 포함되지 않음.

- **이번 제안은 공통적으로 관세를 통한 수입 억제보다 생산성 향상 기술 도입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국내 양산역량 확충을 강조하는 흐름**

- 다만 재정여건과 기존 공제 일몰 논의를 감안할 때, 세액공제·투자 인센티브 확대의 구체적 입법 시점과 범위는 불확실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ITIF (7.20), NASEM (5.14), SIA (7월), SEMI (7월) 및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미국 경제통상 동향

(관세) 美 기업,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 **美 기업, 301조 강제노동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CIT에 소송 제기**(7.20)

- 美 기업(Burlap & Barrel, Collective Horology)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60개 경제권 대상 10~12.5% 강제노동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 제기

- 원고 측은 USTR이 강제노동 관행에 따른 대미 통상 부담과 관세 부과의 적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강제노동 조사는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 글로벌 관세를 301조로 대체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

* Learning Resources 등도 동일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며 제301조 관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 확대

• **301조의 법적 기반은 견고하나, USTR 조사·입증 적정성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

- 301조는 IEEPA 및 제122조와 달리 법률상 조사·절차 요건이 명확히 규정된 통상조치로, 기존 대중국 제301조 관세도 장기간 유지되는 등 상대적으로 견고한 법적 기반 보유

- 다만 이번 소송은 제301조 권한 자체보다 USTR이 법정 조사요건을 충족하고 경제권별 강제노동 관행과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 전문가들은 USTR의 조사·입증 적정성과 관세 부과의 합리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판결이 향후 301조 통상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좌우할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

▪ 자료원 | 폴리티코(7.24), 인사이드(7.24)

(관세) 美 와이든 상원의원, 대통령 관세권한 제한 법안 발의

• **상원 재무위 민주당 간사 론 와이든 의원(민주, 오리건), 7.22(수)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전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의회 무역권한 개혁법 (Congressional Trade Powers Reform Act)" 발의**

-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201·203조에 따른 관세 조치 시행 전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권고와 의회의 공동결의안 통과를 요건화 - 무역법 122조 및 관세법 338조상 관세권한은 폐지 대상에 포함*

- 법안은 USTR을 백악관 산하에서 분리하고 감찰관직 신설도 포함(역대 행정부 반대 이력)
- 와이든 의원은 재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대통령 및 측근의 사익 추구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관세 권한의 의회 환수 필요성 주장 전망

* **미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 **관세 부과 등 통상 규제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 소관**이나, **그간 개별 법률(무역법 232·301조 등)을 통해 해당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위임 - 이번 법안은 그 위임된 권한 행사에 의회 승인 절차를 재도입**하는 것이 골자

-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로도 활용된 바 있으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역대 최다 규모의 232조 조사를 시행해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자동차부품 등 분야별 관세를 다수 부과

-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3월 착수한 강제노동 관행 조사를 7.23(목) 최종 마무리, 대상 60개국에 10~12.5% 관세를 7.24(금)부터 발효 - 대통령 관세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

* **무역법 122조:** 지난 2월 10% 일괄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 7.24(금) 만료
관세법 338조: 7.20(월) 캐나다 대상 50% 관세 부과에 최초 활용, 8.19(화)부터 발효 예정

▪ 자료원 | 인사이드(7.22), 무역대표부(7.23)

(환율) 美 재무부, 한국 등 10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 **재무부는 '25년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환율심층분석대상국은 지정하지 않았다고 발표**

- 재무부는 반기별 환율보고서를 통해 교역국의 외환·거시경제 정책과 불공정 환율 관행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보고

- 관찰대상국은 한국·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로,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정책의 투명성 부족을 지속 지적
- 환율심층분석대상국 지정 기준은 ▲對美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 등 3개 요건*

* 3개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환율조작국, 2개 충족 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태국·싱가포르·스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1개 요건만 충족해 다음 보고 기간에도 1개 이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

▪ 자료원 | 재무부 환율보고서(7.23), 폴리티코(7.23)

(관세) 美, EU의 빅테크 제재에 301조 조사 착수 및 추가 관세 부과 추진

- **트럼프 대통령, EU의 빅테크 대상 벌금 부과에 대해 301조 조사 착수 및 추가 관세 부과 방침 발표**

- EU의 구글 대상 10억 달러 벌금 부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구글·애플·메타·아마존 등 미 빅테크 기업 대상 벌금을 부과한 것을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

- 이에 따라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를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EU에 상당한 수준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예정

- **美 정부, EU 디지털 규제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정하며 통상 압박 강화**

- 그리어 USTR 대표는 EU의 구글 제재가 턴베리 미·EU 무역합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 EU의 디지털 규제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정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랑게 위원장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턴베리 합의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EU의 통상 위험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활용 가능성을 경고

* EU와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보복관세 등 맞대응 조치를 신속히 발동할 수 있는 법률

- USTR는 아직 301조 조사 착수 여부 및 일정에 대한 공식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조사 개시 시점도 미정으로 향후 USTR 발표를 통해 구체화 될 전망

▪ 자료원	인사이드(7.24), 폴리티코 (7.24)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국방수권법 (7.22)	H.R.8800 (하) ('26.5.13)	Mike Rogers (공)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7)〉 ▪ **하원에서 216대 212로 통과된 법안** ▪ 국방부·에너지부 등 관련 기관의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책정하되, 주요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은 제외**된 상태
핵심광물 (7.22)	H.R.9858 (하) (7.22)	Young Kim (공)	〈핵심광물 혁신 파트너십 설립법(Critical Minerals Innovation Partnership Establishment Act)〉 ▪ 핵심광물 분야의 연구·개발, 공급망 강화,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광물 혁신 파트너십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관세 (7.23)	H.R.9892 (하) (7.23)	Craig Goldman (공)	〈핵심광물 혁신 파트너십 설립법(Critical Minerals Innovation Partnership Establishment Act)〉 ▪ 핵심광물 분야의 연구·개발, 공급망 강화,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광물 혁신 파트너십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조선업 (7.23)	H.R.9921 (하) (7.23)	Nathaniel Moran (공)	〈미국 조선소 건설 촉진을 통한 국방·경제안보 강화법〉 ▪ 1986년 제정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개정하여 미국 내 조선소 건설을 촉진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
인공지능 (7.23)	H.R.9925 (하) (7.23)	Jay Obernolte (공)	〈프런티어 인공지능 감독법(FRONTIER Act)〉 ▪ 최첨단 인공지능(frontier AI)의 개발·배포에 대해 연방 차원의 위험 기반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개발사와 고도 모델에 대해 투명성, 독립 평가, 중대한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
중국견제 (7.21)	S.5043 (상) (7.21)	Ted Budd (공)	〈의약품 수입 안전 강화법 (Drug Import Safety Enhancement Act)〉 ▪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조·미승인·허위표시·부적합 의약품의 수입을 식품의약국(FDA)이 차단하도록 하고, 수입 의약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관세체계 (7.22)	S.5081 (상) (7.22)	Ron Wyden (민)	〈의회 무역권한 개혁법(Congressional Trade Powers Reform Act of 2026)〉 ▪ 대통령이 부과하려는 신규 관세 등 통상조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는 법안 ▪ 헌법상 의회 권한인 관세·통상 규제가, 그간 개별 법률(무역법 232·301조 등)을 통해 해당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위임 – 이번 법안은 그 위임된 권한 행사에 의회 승인 절차를 재도입

* 7월 28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CSIS	8/4(화) 9:00 am	〈Navigating the Strait of Hormuz Energy Crisis: Trends and Variety Across Global Policy Responses〉 ▪ CSIS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제롬 빌로도 분석총괄을 초청하여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그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영향,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에너지 시장 교란 대응에 대해 논의	링크
GovConWire	8/4(화) 11:00 am	〈From Policy to Practice: Accelerating NSPM-12 Compliance with a Unified Data and AI Foundation Webinar〉 ▪ 기관들이 비용 부담 없이 NSPM-12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AI 데이터 메쉬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분석·AI·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관리·가시성·상호운용성 개선 사례를 공유	링크

* 7월 28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rump Eulogizes Lindsey Graham as Senate Giant and 'American Original' (트럼프, 린지 그레이엄 추모…"상원의 거목이자 미국의 독보적 인물")
	트럼프 대통령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에서 "미국의 독보적인 인물(American Original)"이라고 추모, "워싱턴에서 중요한 일은 린지 그레이엄이 모르는 채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공로를 높이 평가
The Washington Post	Asylum seekers could be sent directly to deportation under new federal rule (새 연방 규정 시행…망명 신청자 즉시 추방 가능성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발효한 새 규정에 따라 망명 신청자들이 별도 심사 없이 곧바로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 있어, 이번 조치로 약 45만 건의 망명 신청 사건이 이민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다는 분석
The New York Times	Why Iran Is in No Rush to Return to Talks With United States (이란, 미국과의 협상 재개 서두르지 않는 이유)
	휴전 국면 속에서 이란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오랜 압박을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꼽혀
CNN	The new Air Force One just got a big update – and price tag (새 에어포스원 사업 지연…사업비도 수십억 달러 증가)
	보잉이 차세대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개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투입에 나섰으나 첫 번째 기체 인도는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어지고 사업비도 수십억 달러 늘어날 전망
USA Today	Israeli Prime Minister Netanyahu has 'positive' meeting with Trump (트럼프-네타냐후 회담…"긍적적이고 생산적"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회담을 갖고 중동 현안 등을 논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혀

* 미국 동부 시간 7월 28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US26-23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제 분석 및 시사점	2026.7월
US26-22	美 반도체 232조 관세 추진 동향 및 현지 업계·기관 평가	2026.7월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20	트럼프 대통령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시사점	2026.6월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US26-17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현지 동향 및 전망	2026.6월
US26-16	美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추진 현황 및 현지 반응	2026.5월
US26-15	美 국제무역법원의 무역법 122조 관세 위법 판결 주요 내용 및 전망	2026.5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5.28.		
2026.2.6.		

문의	이메일	전화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